

## 국내 주요 뉴스

이번 주 국내뉴스는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와 공개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01

지난 12월 21일,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 공개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한 결과 이번 개정된 지침서를 발간하게 됨.
-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주요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개정사항은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 신설, △원전 경제활동 포함(원자력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임.
- 원전 경제활동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되었으며,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함.
- 한편,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하는 등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시 활용도를 확대할 예정임.

02

지난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보도자료

-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함.
- 기업 규모, ESG 경영도입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응력을 순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기초와 심화로 이원화하였으며 주요 진단항목은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이루어짐.
- 산업부는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임.

03

내년 1월 1일부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보도자료

-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 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국회가 2015년 5월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취업 등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음.
-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한편,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초안을 지난 12월 14일 공개함.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때 기존 고용주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2

## ESG 센터 주요 소식

- [기고] 환경개선부담금의 헌법 문제(환경일보, 2022. 12. 6.)
- 강선우 등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법제도 개선 토론회(로리더, 2022. 12. 12.)
- ‘삶’이라는 파업의 본질에 접근 미흡...정부의 ‘노동 혐오’는 설득력 있게 비판(경향신문, 2022. 12. 19.)
-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메스 댄 의사를 상해죄로 처벌하는 격”(한겨레, 2022. 12. 17.)
- “근로시간의 모호한 경계 논의”(법률신문, 2022. 12. 21.)
- 제4차 ESG워킹그룹회의 개최...ESG 실무진과 공급망 실사 대응법 논의(임팩트온, 2022. 12. 15.)
- “데이터 혁신 필수”...대한상의 · 나이스디앤비, 상품 · 기업정보 연계 ‘맞손’(아이뉴스24, 2022. 12. 13.)
- 매경 ‘아웃룩 2023 대예측’ 저자 ‘직강’으로 배워요(매일경제, 2022. 12. 14.)
- 지평 ESG센터 · 서울대 국제대학원, ‘ESG 경영 연계 개발협력 기업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법률신문, 2022. 12. 7.)
- 서울시 5대 공사 · 공단, ‘서울형 인권경영’ 실천 논의(이투데이, 2022. 12. 2.)
- 사법정책연구원, 13일 ‘국제인권과 사법과제’ 국제콘퍼런스(이투데이, 2022. 12. 6.)

###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

임성택 ESG 센터장 / 대표변호사	T. 02-6200-1746	E. stlim@jipyong.com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T. 02-6200-1803	E.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T. 02-6200-1913	E. hyjee@jipyong.com